



美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TPP 진척과 수입규제 예의주시

11월 4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여 8년 만에 의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이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무역촉진권한(TPA)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협상 중인 TPP 타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남발되었던 수입규제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 여부와 철강산업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조치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14년 美 중간선거 결과

- 2014.11.4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8년 만에 의회에서 주도권 확보
- 공화당은 상원 총 100석 중 36석(1/3, 보궐선거 포함)을 선출하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7석을 확대하며 과반 의석 확보

〈2014년 미국 상원의원 중간선거 결과 요약〉

		공화당	민주당
선출 ¹⁾ (36석)	유지 (27석)	16석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²⁾ , 텍사스, 테네시, 미시시피,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²⁾ , 메인, 알래스카)	11석 (오리건, 뉴멕시코, 미네소타, 일리노이, 미시간,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델라웨어, 하와이)
	변경 (7석)	7석 (민주당→공화당)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콜로라도, 아칸소,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
임기 중(64석)		30석	34석
총		53석	45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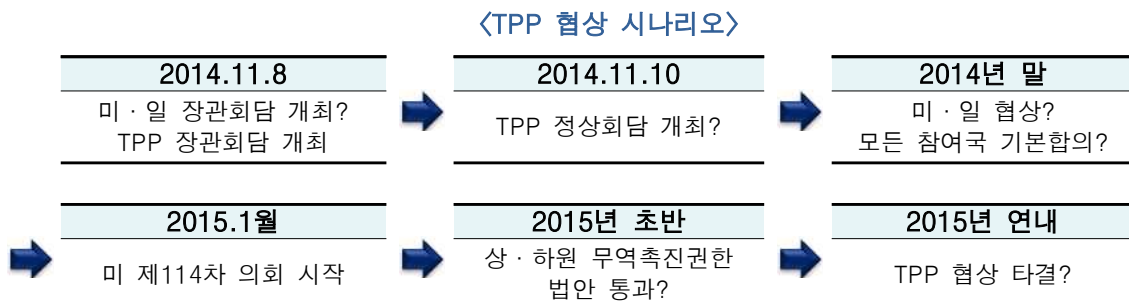
주 : 1) 2개 선거구(루이지애나, 버지니아) 미정, 2) 본 선거 · 보궐선거 진행 지역
자료 : CNN 등 외신 종합

- 하원에서 공화당은 435석 선출에 243석을 차지함에 따라 6년째 다수당 지위 유지

□ 자유무역 성향을 보이는 공화당이 양원에서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11개국과 TPP 협상을 진행중이며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통과시 2015년 TPP 협상 타결 기대

* 무역촉진권한(TPA) :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 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 이행법안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가부(可否)의 의사표시만 결정



자료 : 요미우리 신문, The Japan News(2014.11.7)

○ 공화당은 대부분 친기업적이고 자유무역을 옹호하기 때문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비롯한 무역이슈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력에 있어 최우선 과제임을 밝힌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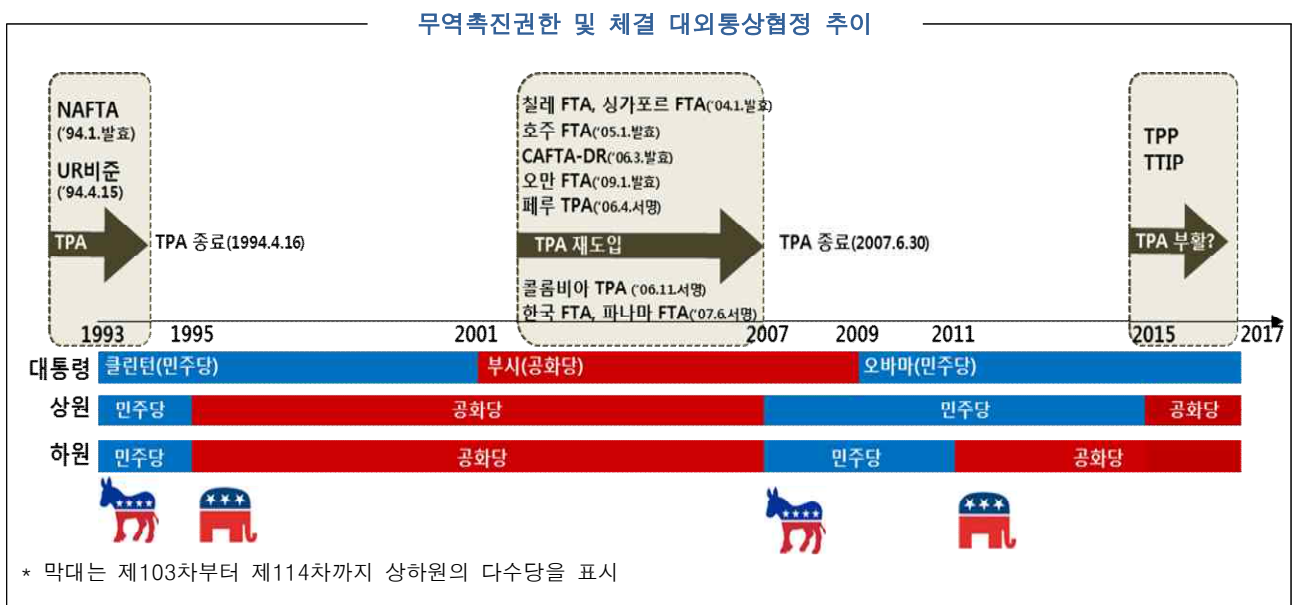
〈미 중간선거 이후 통상 관련 발언〉

오바마(Barack Obama) - 대통령 -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	오린 해치(Orrin Hatch) -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 -
“무역이 공화당과의 협력에 최우선 과제”	“대부분 민주당은 국제 무역에 열의를 보이지 않지만(unenthusiastic), 무역이야말로 미국에게 승리(winner for America)를 줄 것”	“오바마 대통령에게 TTIP, TPP와 같은 무역협정을 타결할 수 있게 신속처리(fast-track) 권한을 주는 것이 협력의 최우선 과제”

자료 : 파이낸셜타임즈(2014.11.5.)

-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력에 회의적인 의견(Tea Party)이 있으며, TPP 참여에 부정적인 자동차 업계가 위치한 미시간주 등은 여전히 민주당 지역으로 남아 있음

- TPP 타결 및 비준, TTIP 협상 진척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TPA)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TPA 부활에 긍정적 영향
- 무역촉진권한은 과거 미 행정부의 다자무역협정 및 다수의 FTA 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미국의 무역확대정책에 기여
-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을 이용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등을 성공적으로 체결, 그러나 1994.4월 이후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연장되지 못함
 - 무역촉진권한은 공화당의 협력 아래 부시 행정부 당시 재개되어 2007년 만료될 때까지 한·미 FTA를 포함한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처리
 - 무역촉진권한 부재시 미국 의회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는바, 실제로 무역촉진권한이 종료된 2007년 이후 미국은 FTA를 타결한 바 없음
 - TPP의 경우에도 미국이 TPA 없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협상 상대국들의 타결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 미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작년부터 철강제품 중심으로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이루어짐
- 작년에 제소된 유정용강관은 올해 최종 판정을 받고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0월에 미 업계가 유사 품목인 API 용접강관에 대해서도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제소를 함

〈2013~14년간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제소일시	품목	제소 및 규제 근거	현재상태
2013.7.2	유정용강관	반덤핑	반덤핑 판정(9.89~15.75%)
2013.9.18	방향성 전기강관	반덤핑	무혐의(10.23일 조사 종결)
2013.9.30	무방향성 전기강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중 (반덤핑 6.88% 예비판정, 상계관세 무혐의)
2014.5.29	강철 못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중
2014.10.16	API 용접강관(송유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예정(11.5)

자료 : 미 상무부

- 특히, 올해는 미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철강 단체 및 제조업 지지를 위해 상무부의 수입규제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시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7월 최종판정에서 기존의 결과를 번복하고 9.89~15.75%의 덤핑마진을 산정
-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이후 중간선거를 앞둔 상하원 의원들이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 상무장관에게 재고를 요청
- 미 상하원(상원 57명, 하원 153명)은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덤핑 무혐의 판정을 재고해 달라는 서한을 미 상무장관에게 송부하는 등 정치적 압력 행사
- * 한국이 9개 피소국 중 유일하게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과 최대 유정용강관 대미 수출국임을 강조, 미국 철강 산업 및 관련 일자리 보호를 위해 엄정한 재심사 요구

〈한국산 OCTG 반덤핑 조사 진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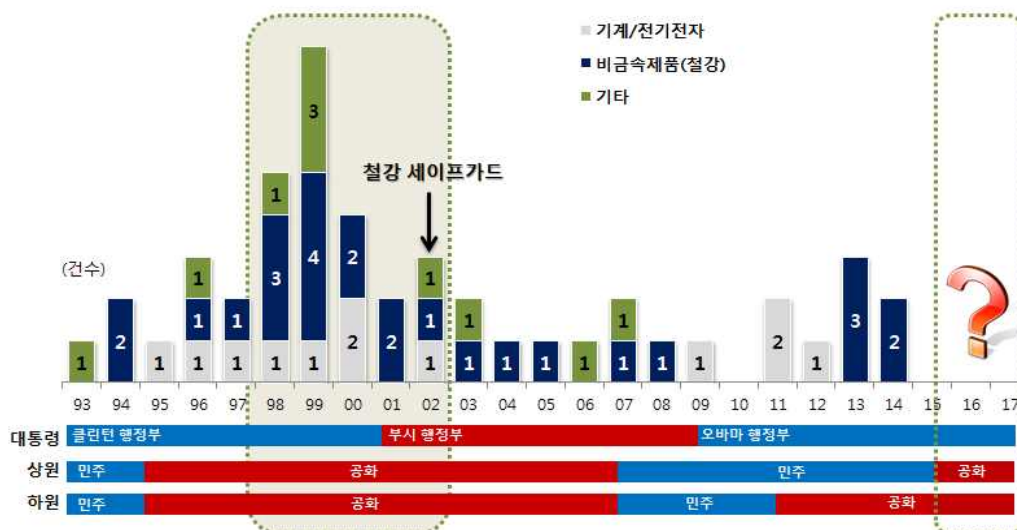
일 자	내 용	비 고
2013	7.2	제 소
	7.22	DOC 조사 개시
	8.16	ITC 예비판정
2014	2.18	DOC 예비판정
	5.15	상원 서한 발송
	6.13	하원 서한 발송
	7.11	DOC 최종판정
	8.22	ITC 최종판정
	9.10	덤핑관세 부과
		반덤핑 관세 부과(연방 관보 게재일)

자료 : 미 상무부

- * 미 의회 철강의원 연맹 의장인 Tim Murphy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 상무부의 판정은 해외 대미 수출국들에게 미국은 불공정 덤핑 수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업계의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
- 과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시기에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으며, 2002년 공화당이 행정부 및 양원을 모두 장악했던 해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여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조치는 미국 의회의 성향보다는 미국 경기와 세계 철강산업의 수급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 승인 및 TPP와 TTIP 타결시 비준을 위해 오히려 국내 업계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연도별 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조치 제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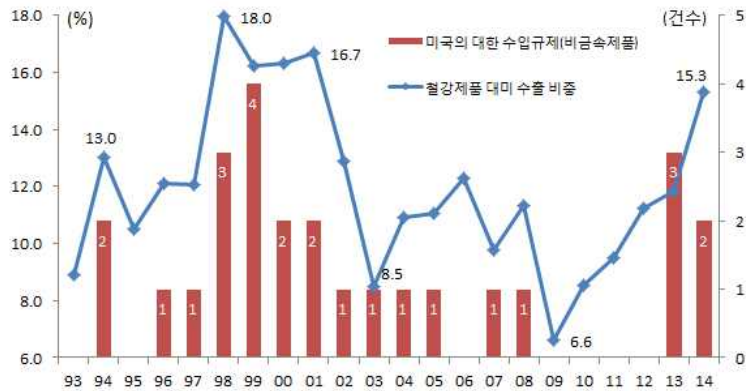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 2002년 3월 5일 부시 대통령은 美 통상법 201조에 따라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후 20개월간 시행하고 2003년 12월 4일에 종료
 - 세이프가드조치로 13개 철강품목에 대해 8~30% 추가 관세 부과
- 부시 대통령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로 철강 과잉생산, 수입증가, 생산력 저하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미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세이프가드 시행
 - 그러나 정치적 배경으로는 ▲2002년 하원선거, ▲2004년 대통령 선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 협상과제인 무역증진권한(TPA)을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철강산업을 배려했다는 분석도 있음(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난 20년간 우리의 철강제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바,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향후 수입규제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음

〈철강제품 대미 수출 비중 변화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자료: KITA.net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중간선거 결과, 8년 만에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친기업적이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주도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TPP, TTIP 등의 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필요한 TPA 법안 통과가 용이해질 수 있음
- TPA 법안이 통과될 경우 TPP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정부와 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상보다 빠른 TPP 타결에 대비하여 미국 정부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나가야 함
- 향후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 교역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철강산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수뇌부간의 무역 관련 논의 동향 및 움직임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공화당이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 시장을 넓히는 반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박지은 연구원 (6000-5234, jieunpark@kita.net)
제현정 연구위원 (6000-5175, hjje76@kita.net)